

인권정보자료실
CPj.d.6

CPj.d.6

우리는 지문날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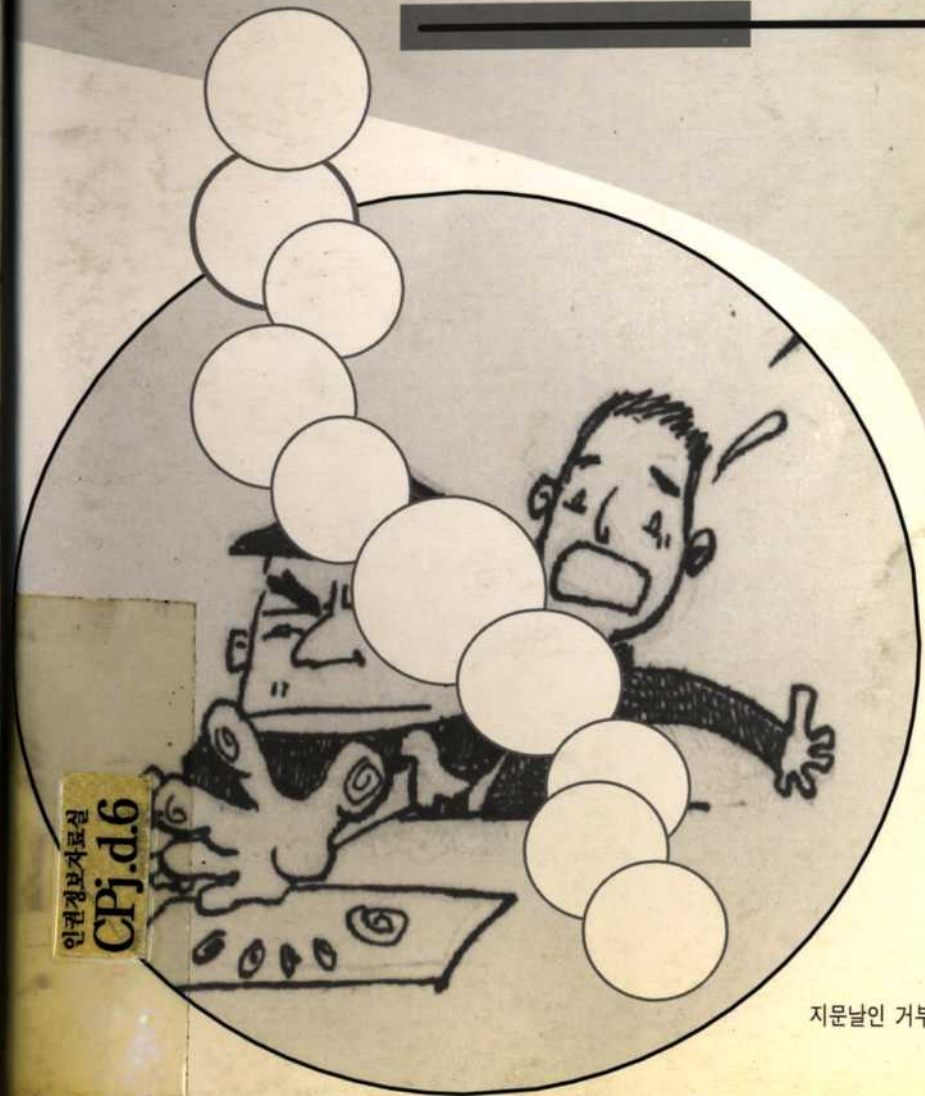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 224+

홈페이지 - <http://fprint.jinbo.net>

인터넷 메일 - fprint@jin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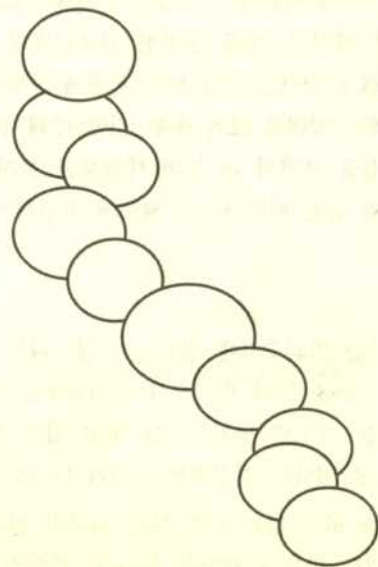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CPj.d.6



지문날인 거부 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책을 내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문명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강제날인이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로 찍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찍으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커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박하려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모든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했던 사실에서 지난 30년동안 지문날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에 저항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지문을 모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입니다. 전 국민의 지문을 기초로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은 곧 국가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범죄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문날인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한 지문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민생치안 수준은 형편없지 않은가요?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단순히 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운동입니다. 나 하나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결국, 경찰국가와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탄생을 불러 오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지문을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지문은 마치 바코드를 몸에 새겨놓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민들의 행동과 의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과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작은 책을 읽고, 우리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2000. 7.

지문날인 거부 224+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란 이런 것입니다

▶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져 30년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 전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국민의 신체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라는 공안기관에서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입니다.

▶ 어떠한 문명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 전자지문 채취와 지문 전산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전자 감시의 위험을 더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 이렇게 합시다

▶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주민등록증의 (전자)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습니다.

▶ 지문확인을 위해 손가락을 펴보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적인 성격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행정 및 증명관련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금융관련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여권관련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지문이 삽입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목 차

책을 내며	2
주요경과	7
제 1부 지문날인제도, 이것이 문제다	9
제 2부 지문날인거부, 이렇게 합시다	17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의의	18
지문날인 거부 행동요령	20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22
제 3부 나는 이래서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27
제 4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35
지문날인제도 10문 10답	36
지문날인 거부 224+는	44

주요 경과 ▶▶

- 1999. 4. 26.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폐지와 플라스틱 주민증 발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 1999. 5. 26.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성명서 발표
- 1999. 5. 27. 주민증등록증 일제 경신 및 전자지문 채취 시작
- 1999. 6. 15.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지문거부 운동 진행 논의
- 1999. 7. 1. 지문날인 거부 1차 151인 선언 발표
- 1999. 7. 15. 한자병기 문제로 주민증 경신발급 3-7개월 연기 발표
- 1999. 7. 19. 한겨레 신문, 경찰청이 10손가락 지문전산화 작업을 1990년부터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보도
- 1999. 7. 19. 경찰청의 불법적인 10손가락 지문전산화 작업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
-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 발표
- 1999. 7. 26. 광주전남지역 지문날인 거부 선언

◀◀ 주요 경과

- 1999. 8. 30.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은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
- 1999. 9. 1.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 2000. 3. 9.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상 투표시 신분증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
- 2000. 4. 8. 지문날인거부자 1차모임, 거부자 모임의 결성 논의
- 2000. 5. 30. 지문날인 거부자 2차모임, '지문날인 거부 78+'발족
- 2000. 5. 31. 지문날인 거부 78+, 구 주민증 법적시한 만료에 따른 대정부 규탄 성명 발표
- 2000. 5. 31.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집회 개최
- 2000. 7. 7. 조선일보, 경찰이 휴대용 전자지문조회기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2000. 7. 10. 경찰의 휴대용 전자지문조회기 도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 2000. 7. 23. 지문날인 거부자 전국등반모임 개최

제 1 부

지문날인제도, 이것이 문제다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국민이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 전체 국민의 지문을 받아서 범죄자나 간첩을 색출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을 범죄자로 여기고 국가에서 강제로 지문날인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문날인제도는 국가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이며, 전체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문명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본당국에 맞서 재일

한국인들은 10년이 넘게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1994년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1999년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고 한국정부도 일본당국에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전국민에게 지문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정부는 오히려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탄압하려 했고 재일한국인들까지 곤란한 처지에 빠뜨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는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마저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거부운동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대해 1980년대 초부터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거부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운동은 1983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측은 이 제도가 외국인을 우범자로 보는 것으로 헌법상 신체검사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신체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프라이버시의 권리),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문날인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코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983년 11월, 동경 변호사회가 참여한 지문거부소송 전국연락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1984~85년에 최고조에 달하여 1985년 말경에 일본인을 포함하여 180여만 명이 지문날인철폐에 서명하였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에는 민단은 물론이고 조총련과 일본내 학자, 변호사 등이 광범위하게 결합한 대규모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동경대의 한 교수는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오로지 원초적인 인간의 권리, 순수한 인간적 염원 구현만이 높이 외쳐진 인간회복 내지 인권회복의 운동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국가에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강제로 전국민의 피를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더 쉬운 방법으로 전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적인 존엄을 해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지문날인도 이와 똑같은 제도입니다. 지문은 피나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체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더욱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지문날인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한 인격권을 해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지문날인제도는 지난 30년동안 법률적인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주민등록법에서조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 도입문제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이 사회문제가 되자 1999년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으로 '지문'이라는 단어만 추가시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시켰다고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 지문날인을 받는 목적을 설명하지도 않고 있으며, 설혹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서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덧붙이더라도 앞서의 설명과 같이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조차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자 색출과 대형사고시 시신확인 그리고 간첩색출을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렸을 때, 학교에서 채변봉투를



수거하여 기생충 박멸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지문날인도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국민 지문날인제도가 우리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1998년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1년간 총 범죄 150만여건 중에서 약 1,000여건의 범죄를 지문감식에 의해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도대체 초범 검거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600만명 국민의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것은 년센스에 불과한 일입니다.

또한,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원 확인방법은 지문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씨랜드 참사에서보듯이 이틀만에 사고를 당한 모든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지문을 통해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대체 다른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역시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간첩색출을 위해 전국민의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첩과 지문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30년전 남북대치 상황을 이유로 만들어졌던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설혹 범죄수사와 시신의 확인에 약간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날인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효율성이 문제라면 비용도 저렴하고 정확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은 안위에도 없고 단지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지문날인제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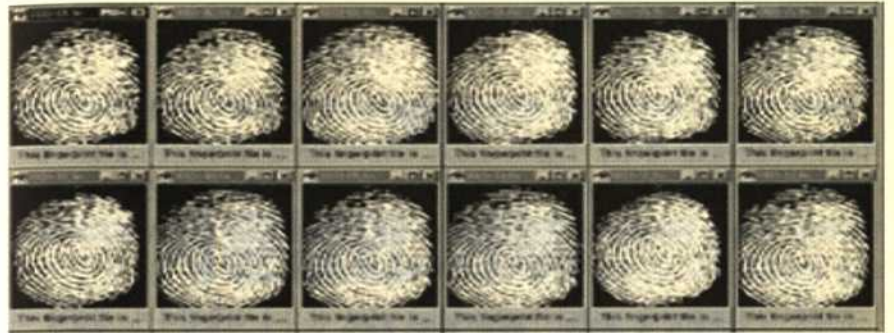
지문을 잘 보면, 지문의 소용돌이 모양이 손가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0자리 지문번호를 매겨 관리해왔습니다. 가령, 소용돌이가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면 1번,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면 2번 하는 식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모두 10손가락마다 이런 번호를 매겨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면 사람마다 서로다른 10자리 지문번호를 갖게 됩니다. 불심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손가락을 펴보라고 하고 무전기를 통해 지문번호를 알려주고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문정보를 새롭게 가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 몰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지문번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법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열손가락 지문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지난 19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당시까지 1965년생 이하 남성 800만명과 여성 370만명 등 도합 1170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2002년까지 전체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입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문날인 자체도 문제지만, 애초에 종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시키는



데에는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0년이 넘게 이런 일을 해오면서도,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지문은 손가락에 새긴 바코드입니다

몇 년전에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라는 것을 도입하려다 국민들의 반발로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에는 IC(전자)칩이라는 것을 삽입하려 했는데, 바로 전자지문은 IC칩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핵심기능을 전자지문으로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바로 전자지문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전산입력시켰습니다.

결국 전자지문은 전자주민카드를 손가락에 새겨놓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은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고 고의로 훼손하지 않는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찰청에서는 조회 목적으로 특수 전과자에 한하여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특징점으로 사람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우려됩니다

1999년 5월 초, 대학가 시위 때에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전자지문감식기를 역이나 고속터미널, 대학가 주변에 가지고 나와서 지문을 전자감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 지문과 사진까지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조회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학가 시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전자지문감식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용 무선조회기가 도입되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된다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 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거리의 행인을 붙잡아 범죄인 취급하는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자지문감식과 사진감식을 통해서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지문감식은 범죄검거에 별반 큰 실효성도 없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손가락을 전자지문감식기를 통해 조회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의 몸수색을 하거나, 행인을 발가벗기우고 신체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법의 통제도 받지 않고 지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지문날인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경찰이 이런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민주국가에서 경찰이 전국민에 대한 특정한 신체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법률적인 규정조차 없이 경찰이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지문 채취와 관리에 대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법의 통제도 받지 않은 강제적 지문날인 채취는 잘못된 일입니다.

제 2 부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합시다





1.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 바로 지문날인제도입니다. 지문날인제도는 남북대치의 상황과 군부독재치하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노릇을 하고 3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범죄인 다루듯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는 몫은 다음 아닌 주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지문날인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국민권 권리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정부에서 읍, 면, 동사무소 등 기초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니, 주민등록증 말소니 하는 협박을 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을 무시한 월권행위입니다.

▶ 지문날인 거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수십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압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와 남북관계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냉전논리에 기반해서 실시된 지문날인제도는 그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되지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며 모든 국민들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군부독재에 버금가는 전자적 감시통제를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 하나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전자지문채취를 근절시키는 것은 정보감시사회로의 역행을 막는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지문날인 거부

2. 지문날인 거부 행동요령

- ▶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새 주민등록증의 전자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습니다
- ▶ 지문확인을 위해 손가락을 펴보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적인 성격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합니다
- ▶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민등록증 소지는 국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문날인을 거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증을 대용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 생활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용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신규통장개설과 고액송금을 할 때에도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적금을 탈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토익, 토플 시험을 볼 때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때에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문날인제도는 폐

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과 해당기관의 답변을 지문거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행정 및 증명관련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금융관련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여권관련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삽입되어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한 이유로 전자지문이 새겨져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용신분증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대용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http://fprint.jinbo.net>)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을 통해 지문날인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거부 서명을 포함해서 지문날인 거부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30년간 유지되어 온 악습을 폐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용신분증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로우대증은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변호사, 의사, 성직자 신분증, 전역증, 학생증 등 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2)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각종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 때에도 대용신분증이 있으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익, 토플, 텡스 등 영어시험의 경우 학생증은 통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본비자 발급시

대용신분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대사관에서 한자 이름이 있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때, 호적등본(사본 아님)을 주민등록증 대신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용신분증이 없는 경우>

▶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용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 아무런 대용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1. 은행 및 금융서비스 이용할 때

▶ 신규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본인 신분확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액송금을 해야 할 경우 신분증명 없이 고액송금이 불가능하며, 대출 받을 때나 기타 금융서비스 이용시에도 대부분 신분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명확인하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 적금을 탈 때

적금 불입을 다 마치고 적금을 탈 때에 본인 신분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분증이 없으면 수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서비스 이용 및 각종 증명발급을 원할 때

▶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등 행정서류 발급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발급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용신분증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무런 신분증도 없는 경우 대부분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행정자치부 등 해당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전·출입신고

전·출입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입신고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입신고를 받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에 “지문날인 거부자라서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출입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라고 당당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입신고를 받지 않는다면 담당 직원의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고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때 투표방법

6.8 보궐선거에는 구 주민증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궐선거 또는 총·대선이 있는 경우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에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투표방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이라도 신분증이 없는 이유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생활관련

▶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불심검문을 받을 때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지문날인 거부자라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고 ‘불심검문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문을 보자고 하면, 당연히 이를 거부합니다. 또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역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파출소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그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불심검문을 받게 되면 우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몰아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받을 때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받을 때,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 기타 최대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고 훈련에 참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증명서의 경우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입장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받고 추후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작성요령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씨는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입장시키지 못했습니다.

2000년 00월 00일 담당자 *** 서명”

▶ 각종 시험의 응시 ->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제 3 부

나는 이래서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지문날인거부 홈페이지에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면 관계상 많은 분들의 의견을 실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주민등록갱신이 시작되고 몇달 뒤쯤에 아내와 함께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소신껏 주민등록갱신을 했고, 나는 직원에게 직접 지문날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로는 집으로 (반)협박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문날인 거부 외에 한자이름 넣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얼마전 아내를 대신해 바뀐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갔더니, 한참 찾다가는 등록되지 않은 한자여서 5월달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왜 쓸데없이 한자를 넣겠다고 해서 이런 불편이냐"고 했더니, 직원도 수긍 하더군요. 일본의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큰소리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민족주의'를 넘어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 자신도 이런 저런 불편에 못이겨 지문날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국가 권력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신민'이 더 이상 아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은홍(amos@kidok.co.kr)

자라나는 우리의 손들에게 사람다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비합리적이며 옳지 않은 제도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들의 손들에게 사람다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또 보여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감시대상이 아닐 뿐더러 정부의 위헌적인 제도에 굴복하여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문날인의 숨은 의미는 인간으로서

의 참된 권리와 의무를 오롯이 박탈하며 굴종을 강요하는, 마치 광적인 종교집단의 사기행각과도 같습니다. 참된 자유의 뭉은 국민의 것입니다. 정부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문날인,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또한 위헌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의 고혈같은 세금을 정부가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여러분, 우리 세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유영원(ilamp@dreamx.net)



[미래의 희망, 우리도 거부한다]

지문날인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 중2의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통해 지문날인의 부당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될 한 사람으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까짓 지문이 뭐 어떻다고..'라고 생각하던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문에게 그렇게 큰 위력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문날인이 우리 모두를 예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이라니...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하연

어리지만 저도 반대합니다. 아주 강력히

저는 아직 15살의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이 나쁜 것인 줄도,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도 여기 들어오고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 지문날인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 아니 제 동생도 나이가 차면 지문날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이 치욕스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선 찍으셨겠지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어리지만, 저도 반대합니다. 아주 강력히.

김도빈

한국인의 후예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아빠 따라 미국에 왔는데 항상 한국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정말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인의 후예라는 사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요...

장한나

[비록 끝까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늘어가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느라 온 세상이 분주합니다. 저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향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문날인 거부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노발대발하시더군요. 지난 추석 때 조심스레 거부 의사를 말씀 드렸다가 어여쁜 딸 학교에 등교시키듯 저를 동사무소 앞까지 태워다 주셨었거든요.

물론 저는 날인을 거부하고 차로 돌아와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지요. 연휴가

당신의 <지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 주먹을 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나면 저는 지문날인을 할 겁니다. 늘어가시는 아버지를 이따위 년센스 때문에 노여워하시게 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의 아버지는 북송선을 탔다는 큰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로 무척이나 고생하신 분입니다. 이번 일로 저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게 될까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죠.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운동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그리고 훗날 저의 장성한 아들딸들에게 지문날인을 종용하는 아버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모두들 새천년, 복 많이 받으세요.

고성연(ellbang2@sun.ac.kr)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갱신을 한 후이긴 하지만, 이 운동이 결실을 맺어 그동안의 제 개인정보들이 모두 삭제되길 희망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당한 일입니다. 조폭 같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들이 친구의 주민증번호를 보더니 이젠 내가 어딜 가도 알 수 있으니 신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언제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인권의 정부라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이런 제도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강맹수(telman@hanimail.com)

【몸은 멀리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 부터 지금까지 몇번인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면서 제일 동포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출장이나 휴가로 귀국을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출국전에 동사무소에 잠깐 들르라고 하시지만, 몇번이고 느낀 그 굴욕적인 기분을 내 나라에서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 드는 한, 끝까지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정은(eun2622@hanimail.com)

여름에 귀국하더라도

항상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에 대해선 일면기사로 다루는 언론들...

글쎄요, 일본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강요(?)했지만 우린, 우리 국민에



게만(!) 강요한다니. 글쎄 이견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저는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라 아직은 새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름에 귀국하기에 저마저도 지문날인을 강요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자신도 지문날인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정부의, 우리정부에 의한, 우리정부를 위한" 바보취급 받지 맙시다!

박재영(jaspark@hotmail.com)

【외국인도 반대하는 지문날인제도】

한국에 유학와서 처음해본 지문날인

이타가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 서명운동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참여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차별적인 외국인 등록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아직 차별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유학와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신분증을 외국인등록증에 한번 이상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리국가에 대해서 평소 모순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명운동에 찬성하였습니다.

이타가키 류타

서로서로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일본인 학원강사입니다. 오늘 동해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서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연장 때문에 담당자가 억지로 지문날인을 시켜서, 승복하지 않았지만 결국 했습니다. 지난 해도 그렇고 2년 전에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놀랐습니다.

담당자 공무원이 저같은 외국인 경우, 체류기간이 1년이 지나면, 체류허가 연장 때, 반드시 지문날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사실 저는 1993년 첫번째 등록할

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도 출입국기록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손을 더럽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는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도 하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미력이었지만, 외국인 지문날인 의무폐지에 위한 운동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이 제도가 없어졌단 사실은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랑 남아 있는 문제도 있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에서 동포가 인권침해를 받으면 한국에서 재한일본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민중을 지배하는 체제를 한일간에 서로 협력해서 지키자고 하는 사상이지 않겠습니까? ...

인권문제는 언제나 약한 입장의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이 일은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인권침해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것은 우리 일본에서 있는 소수자 차별문제를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이웃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키주키 야스오

제 4 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1.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

1. 불법적인 지문전산화 작업을 중단하라.

1.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삭제하고 신분증명제도를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거나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련번호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지문을 삭제하고 사진, 이름, 주소만을 기재해야 한다.

1.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안망의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라.



지문날인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 지문날인제도 10문 10답

Q1 :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1 : 1968년은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혼란의 와중에 변변한 검토도 없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 일본에서 제일한국인 지문날인 문제가 국제문제화된 적이 있는데, 그 후 제일한국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A2 : 1980년대 중반부터 제일한국인들은 일본당국의 제일한국인 지문날인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994년 일본정부는 2차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여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범죄자외에 어떠한 사람도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 우리나라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A3 : 국가차원에서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자에 제한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고, 일본과 같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위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 지문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분확인, 간첩색출에 필요하 다던데...

A4 :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첫째, 범죄자 색출과 둘째, 대형사고시 시신확인 그리고 간첩색출을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명분도 실효도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범죄자 검거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문을 대조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받는 것은 명분도 효과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지문을 통한 시신의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대체 다른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간첩색출을 위해 전국민의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 역시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실효성도 없습니다. 간첩과 지문의 연관관계를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30년전의 남북대치 상황을 이유로 유지되었던 지문날인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Q5 : 지문날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A5 : 지난 30년동안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적인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주민등록법에서조차 언급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령 별지

서식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제 문제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1999년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으로 '지문'이라는 단어를 추가시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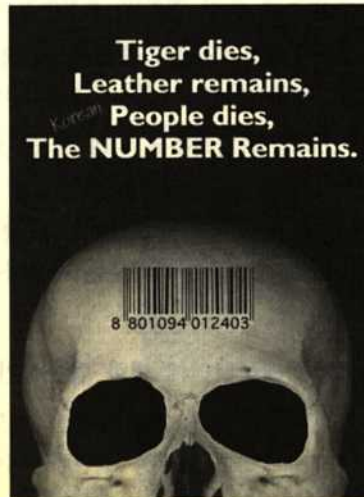
하지만,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지문제도가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문날인은 주요한 국민의 신체 정보에 해당되고, 국민들의 잠재적 범죄자로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Q6 : 지문날인과 함께 주민등록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나요?

A6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민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민들의 거소 파악을 위해서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강제등록이지만, 외국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시에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양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소와 성명 등 몇가지 간단한 사항만을 기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주소이동 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직업 등 141개의 항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민 고유번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개인의 핵심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받은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Q7 : 이번에 정부에서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A7 : 정부에서 전자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은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고도화된 주민통계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라 여겨집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지털로 채취된 지문정보를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바로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지문은 개인마다 특징이 모두 달라서 홍채(눈의 검은부분), 치아구조와 함께 인증시스템(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지문을 채취해 놓으면 지문감식기를 통해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지만, 지문이 디지털로 되면 지문감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모든게 지문인식기를 통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1999년 5월 대학가 시위 때에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전자지문감식기를 역이나 고속터미널, 대학가 주변에 가지고 나와서 지문을 전자감식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비밀리에 휴대용 전자지문조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Q8 : 경찰에서 이미 종이에 찍은 10손가락 지문을 전산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8 : 사실입니다. 1999년 7월 19일자 한겨레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지난 19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당시까지 1965년생 이하 남성 800만

명과 여성 370만명 등 도합 1,170만명의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전산화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이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고 이를 전산화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첫째, 지난 30년동안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구나 이러한 지문을 경찰에 넘겨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10년 가까이 이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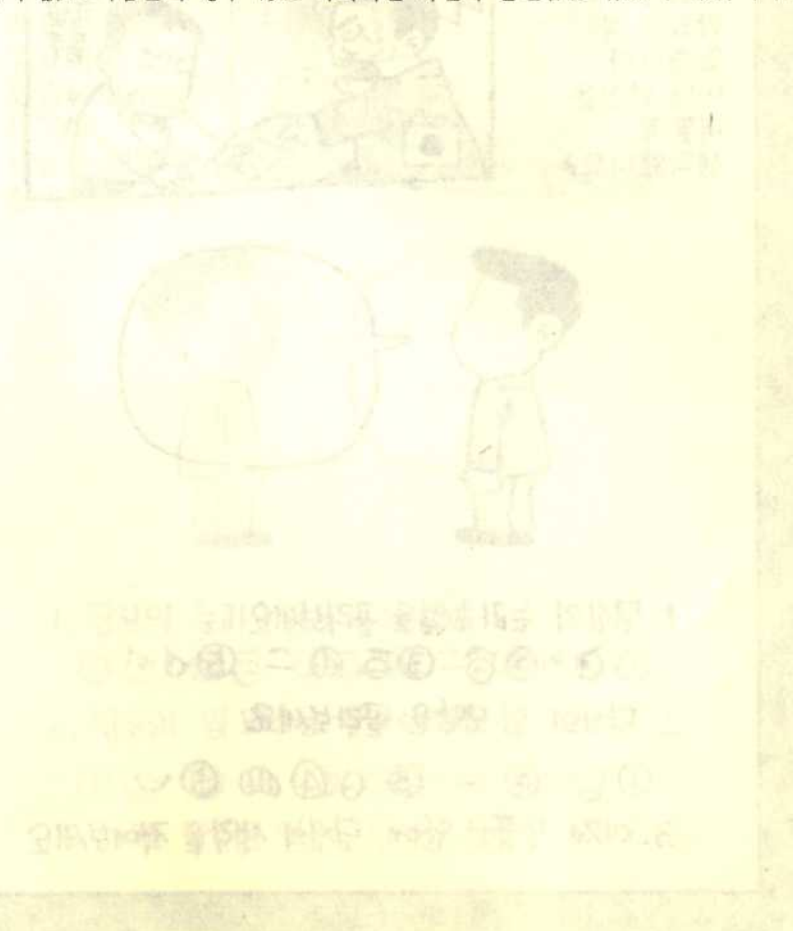
Q9 : 플라스틱 주민증이 전자주민카드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9 :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바로 전자주민카드 수록정보의 통합과 중앙집중적인 발급 시스템에 있는데, 이번 새 주민증 발급도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이번 주민등록증 발급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IC칩(전자칩)만 빠져있을 뿐, 모든 장비들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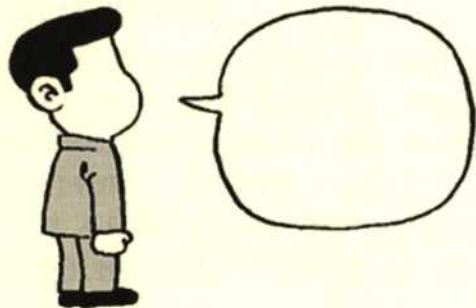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IC칩 대신에 전자지문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지문 채취로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전자지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에도 지문감식기에 손을 대고 들어가야 하고, 만약 금융망이나 다른 정보망과 연결되면 전자주민카드와 똑같이 사용되고 맙니다. 지문이 바로 현금카드이자, 신용카드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플라스틱 주민증은 주민증 자체의 수록내용이 조금 축소되었을 뿐, 전자주민카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Q10 :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았다고 법적인 제제가 있습니까?

A10 :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지문날인거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회적인 차별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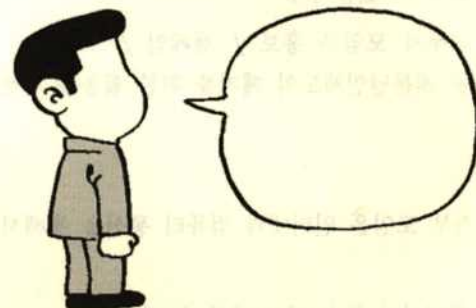


한때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1. 당신의 눈과 눈썹을 골라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당신의 입 모양을 골라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3. 이제 말풍선 안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당신의 눈과 눈썹을 골라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당신의 입 모양을 골라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3. 이제 말풍선 안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지문날인 거부 224+를 소개합니다

- ▶ 지문날인 거부 224+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희망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 ▶ 노동자, 주부, 교수, 변호사, 의사, 성직자, 학생 등 현재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은 홍보 / 캠페인 / 토론회 / 직접행동 / 국제연대 등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문날인 거부 모임은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fprint.jinbo.net>

메일링리스트 : finger@list.jinbo.net

이메일 주소 : fprint@jinbo.net

- ▶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습니다.

한빛은행 167-07-123558 홍석만

국민은행 812-01-0134-240 홍석만

발행처 : 지문날인 거부 224+

편집자문 : 김기중, 이창조

삽화 : 이동수 화백

편집 : 홍석만, 박준도, 박주영, 최이숙

발행일 : 2000. 7. 22